

금남로에서

갈 곳 잃은 호남 표심 “궤바디스!”

(여리로 가야 하나)



박치경 수석 논설위원

총선은 터졌다. 내년 12월 20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전쟁(힘겨루기)이 시작됐다. 지난달 개최한 정기국회에서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이 불러온 파행. 이를 대선 전조전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차기 대선 구도는 매우 혼미하다. 주요 정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의 3각 체제를 기본 골격으로 ‘비론’(비문재인)과 ‘비박’(비 박근혜)이 헤쳐 모이지는 제3지대론에다, 새누리당과 특검정파의 연대론까지 나오는 판이다.

정권 교체는, 정권 재창출이면 차기 대선의 최대 관건은 단연 호남 표심일 것이다. ‘주인’ 없는 상태에서 대선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호남 표. 대체 어디로 가야 할단 말인가?

갈 곳 잃은 호남 표심을 경영학의 ‘S-WOT’ 원리에 적용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기업이나 투자자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자신의 강점(Strength)·약점(Weakness)·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요인을 따져 최적의 선택을 한다. 호남 표의 진로를 이에 대입해 결과를 예측해 보자는 것이다.

먼저 지난 총선 민심처럼 국민의당 후보를 전폭 지지하는 경우다. 호남 표심이 그대로 녹아 있어 선명한 정체성을 토대로 ‘호남정치’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게 최대 강점이다. 그러나 호남민 스스로도 국민의당 현재 위상만으로 독자적인 대권 획득이 가능하겠느냐며 회의적이다. 명분은 좋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과의 괴리다. 가장 큰 약점인 셈이다.

선택의 혼란 다양한 관측

그렇더라도 최대 메리트인 호남 민심을 바탕으로 외연 확장 기회는 있다. 당장 야권 단일화 추진 시 한 축이 될 것이고, (국민의당은 극구 부인하지만)새누리당과의 연대가 시도된다면 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둘 다 연대 과정에서 흡수되거나 종속될지 모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다음, 더민주를 밀어주는 경우다. 제야당의 적통을 있고,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호남 3석이라는 한계에도, 무엇보다 더민주 대권 후보군에서 가장 유력한 문재인에 대한 거부감이 최대 걸림돌이다.

야권 단일화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욕구는 더민주가 호남에 표를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이다. 다만 문재인이 단일 후보가 되면 노무현 정권에 이어 호남 소외가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의식과 망설임

이 따른다. 특히 광주·전남·북 유권자들의 급속한 고령화는 장애 요인이다. 노년층일수록 ‘친노’·‘친문’ 거부감이 크고, 한번 돌아서면 마음을 잘 풀지 않아 총선 표심을 쉽사리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는 호남 유권자들이 제3지대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국민의당은 힘이 약해 보이고, 더민주는 썩 내키지 않으니 제3의 지대에서 후보를 골라 보자는 것이다. ‘비론’-‘비박’에서 뺀 후보가 호남 지지를 당선된다면 지역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호남의 정치적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경험적 사실화한 성과나 지역 뒷받침이 없는 제3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에는 범위를 대폭 넓히는 개념인 야권 ‘통합 원상 경선’이 제기됐다. 문재인-안철수를 포함한 모든 주자가 참여해 사실상 야권 후보의 단일화를 이루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과 야권 주자의 양자 대결로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서 정권 교체 확률이 가장 높아진다. 이때는 호남 표의 비중도 극대화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 문재인과 안철수는 싸늘한 반응이지만 나머지 잠룡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도 문제는 문재인이다. 그가 후보로 선출되면 호남이 표를 몰아줄지 장담하기 어렵다. 앞서 거론한 ‘문재인 기피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되면, 아예 새누리당 ‘진박’ 울타리에서 벗어나 통합 경선에 나서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한다.

통합경선 과연 이뤄질까

마지막으로 호남과 새누리당의 연대가 있다. 곡성 출신 이정현 대표라는 연결 고리가 있기 때문인데, 반기문 총장이 후보로 뽑힐 경우 호남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반기문 대세론이 형성된다면 이정현 대표 효과와 맞물려 호남 표도 일정 부분 움직일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반기문 대통령-진박 총리’개헌을 통해 호남 중도 보수세력을 깨어난 ‘영·호남·총정 연합정권’ 구상도 나오고 있다.

호남 표심이 정권 재창출에 기여한다면 지역감정 해소와 동서통합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차기 정부 인사-예산에서 지분을 확보하는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것 또한 강점이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당장 호남 정치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지역 구원원 간의 갈등과 ‘기회주의적 행태’라는 비판 등 내우외환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직 대선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으니 의외의 변수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운 호남 유권자들은 지금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궤바디스!’(여리로 가야 하나)

/unipark@kwangju.co.kr

은편칼럼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

1949년부터 1969년까지 서독을 이끈 기민련 정부는 동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동독을 봉쇄하여 흡수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1969년 집권한 사민당 출신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는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했다. 그는 가능하지 않은 통일을 이야기하고 동독을 붕괴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산가족들이 재회하고 교류하도록 하는 것이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는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독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여 동독인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행해야 할 기본 도리라고 주장했다. 브란트는 이런 방식으로 평화공존하면서 함께 더불어 산다면, 그리하여 민족의 동

질성을 회복한다면 절반의 통일은 실제로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야당인 기민련·기시련과 보수 언론에 의해 집요하게 공격받았다. 야당은 197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브란트를 불신임투표에 회부하였고 그는 겨우 2표 차이로 구제받았다. 동서독간의 기본조약이 체결되자 야당은 의회에서 비준해주려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사민당과 그 연정파트너인 민주당 의원만으로 기본조약을 통과시켰다.

1972년 재선에 성공한 브란트는, 그러나 1974년 동독 스파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시련을 맞는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큰 혜택을 보았던 동독이 브란트 주변(비서)에 스파이를 심어두었는데 그게 드러난 것이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과 보수언론은 일제히 브란트와 동방정책을 조롱하면서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 결국 브란트는 1974년 임기 2년을 남겨두고 중도 사퇴하고 만다. 만신장이가 된 그는 한 때 자살까지 결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브란트의 상처로 끝났을 뿐, 동방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의 후임자인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에 의해 8년 동안, 그리고 1982년 정권을 잡은 경쟁자 기민련의 헬무트 콜(Helmut Kohl)에 의해 8년 동안 계속

동서독 화해정책이 추진되었다. 서독 정치인들의 성숙함이 잘 드러난 대목이다. 1990년의 독일 통일은 바로 20여 년 동안 지속된 동서독 화해정책과 동구 공산권의 몰락, 서독의 국력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브란트가 1990년 독일 통일과 함께 1974년의 불명예를 깨끗이 씻고 명예회복을 한 것은 물론이었다.

동방정책의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타고, 또 그 동방정책 때문에 큰 시련을 겪었던 브란트를 생각할 때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햇볕정책이 생각난다. 특히 남북이 대결의 농도를 질게 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 시점에서 더욱 간절하게 브란트와 DJ가 생각난다.

박정희가 1973년 DJ를 동경에서 납치해 죽이려 했을 때, 전두환과 신군부가 1980년 DJ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때 내세운 대표적인 죄목은 연방제론을 필두로 한 그의 진보적 통일관이었다. 그러나 DJ는 이런 수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1988년 ‘공화국 연방제 통일의 길’이라는 글을 썼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95년에는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을 출간했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으면 역사가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해 줄 것이라는 신념이 그를 이

렇게 용기 있게 만든 것 같다.

민주평화세력의 중심 정당이라고 자처하는 제일야당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의 주요 사안 중 하나인 사드배치에 대해 지금도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이 눈치 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주요 이유가 내년 대선에서의 표계산 때문이라고 한다. 다행히 국민당과 정의당이 사드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들은 힘이 약하다. 또 언제까지 이 주장을 지속시킬지 알 수 없다.

다시 한 번 느끼지만 남북화해와 평화정책은 DJ처럼 민족문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목숨을 건 도전이 없이는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 브란트의 논리처럼 남북화해와 공존을 통한 민족 통일성만 유지해도 절반의 통일은 이루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평화공존이 어렵고 또 죽기 살기로 싸우는지 모르겠다. 통일을 이룰 능력과 방안도 없으면서 겹겹이 동맹 운운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이 남북에 느껴진다. 제2의 DJ가 나오고, 역사가 합심하여 절반의 통일이라도 이루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에너지 신산업 우수인력, 광주·전남서 키워야



이동휘 동신대 융합정보보안전문교수

2030년부터 에너지 신산업 분야 매출 100조원,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목표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그 중심에 광주·전남 ‘빛가람 에너지밸리’가 있다.

하지만 화려한 청사진 이면의 현실에서는 빛가람에너지밸리 이전 예정 및 이전 대상 기업이 광주·전남 이전을 꺼리고 있는데, 기술 인력의 이탈과 지역 기술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교육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1위가 교사, 2위가 공무원, 3위가 의사, 4위가 법률가이다. 우리지역도 마찬가지이며, 이번 대입 수시결과에도 전통적으로 안정적 직업을 택할 수 있는 학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졸업 후에도 전공을 불문

하고 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지역 9급 공채 시험의 경쟁률은 68.8대1, 평균 응시율 72.8%, 실질경쟁률이 50대 1에 달했다.

100명 중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8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에 반해 빛가람에너지밸리에서는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을 비롯해 대·중·소 기업들이 에너지 신산업 전문 인력을 예타게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로 미루어볼 때 2020년에는 최고의 전문직 직업군으로 불릴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도 에너지 신산업을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한 전공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신산업 전문 인재 양성기관으로 인정받은 동신대학교 에너지융합대학은 교육부의 산업연계형성장화신대학(프라임)에 선정되어 연간 47억 원, 총 146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에너지신산업분야 2개 전공(융합정보보안, 신재생에너지)을 확대 개편하였고, 5개 전공(신소재에너지, 전기

차제어, 에너지기체설비, 에너지IoT, 에너지시스템경영공학)을 신설하였으며, 전기공학 전공을 확대하였다. 제1전공을 이수하고 스마트그리드 전공 등 에너지 신산업 융합전공을 통해 최소 2개의 전공 학위를 부여 받게 된다.

에너지신산업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빛가람에너지밸리 공기업 및 강소기업 300여개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분석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 직무능력별 공동교육과정 및 융합전공과정을 만들었다.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에 이어 에너지 신산업이 주류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미 타 지역에서도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주목하고,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가 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실리콘밸리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모든 여건이 우리에게 있다고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해안과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社 說

민주사랑방 홍남순 자택 폐가로 방치해서야

흔히 광주에는 ‘큰 어른’이 없다고 한다. 어떤 큰일이나 분규가 생겼을 때 경륜과 지혜로 해법을 내놓고 따뜻하게 구성원들을 다독여 줄 정신적 지주의 부재를 이르는 말이다.

이런 터에 오는 14일 10주기를 맞는 고 홍남순 변호사의 죽적은 매우 커 보인다. 민주성지 광주 역사와 함께 한 그는 군부독재 시절 민주인사에 대한 무료 변호에 일상이기도 했다. 자신도 ‘대일 굴욕외교 반대 투쟁위원회 전라남도 위원장’ ‘광주 5·18사태 수습대책위원장’ 등을 맡아 시대의 요청에 부응했다.

그인이 활동하던 당시 술한 민주인사들의 발걸음이 모였던 곳이 바로 광주시 동구 공동 15-1번지 자택이다. 1950년대 광주지법 판사 부임과 함께 거처로 삼은 이 곳은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민주 사랑방’으로 불렸다. 박정희 독재 정권 반대 투쟁 호남 지역 거점이기도, 광주 학살 당시에는 항쟁과 수습 대책

회의로 많은 이들이 밤을 지새웠다. 진압 경찰에 쫓기던 시민·학생들은 이 집에 몸을 숨기며 가뭄 숨을 몰아쉬었다.

한때 이처럼 뭇 깊은 집이 언제 쓰러질지 모를 지경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수차례 주인이 바뀌었지만 후손들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 여태 집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소유주의 양해로 그의 넷째 아들이 살고 있지만 빚물이 세고 장판은 썩어 폐가나 다름없다고 한다.

광주시는 한때 이곳의 보전을 위해 ‘민주의 집’이나 5·18 민주화운동 시작지 지정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산과 형평성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제 광주시의 5·18 단체 등은 하루빨리 집을 매입해 보수하고 상세한 안내문도 비치해 지역사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광주를 위한 흥변호사의 현신에 비취고 그의 숨결이 배어 있는 집 한 칸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 예산 집행 왜 미루나

광주시의 최대 역점 사업인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지 조성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 가까스로 확보된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 추진의 첫 단추조차 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연말이 다 되어 가도록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관련 국비 30억 원의 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국비 30억 원에 시비 18억 원을 보태 자동차 산업단지 설계비와 기반 구축비로 쓸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국비로 확정됐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된 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국회에서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아마도 녹록치 않다. 광주시도 기재부가 국·시비 부담 비율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내년 예산안 미반영은 물론 예산 집행도 늦춘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과거 이같은 사례가 없어 난감해 할 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국민 대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내년 정부 예산에 반드시 사업비가 반영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발전 핵심 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광주시와 정치권은 올 예산 30억 원의 빠른 집행과 내년 예산안 반영을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여미지(如美地)는 ‘가장 아름다운 땅’이란 뜻이다. 제주 최고의 명당이라는 중문 관광단지 안에서도 가장 전망 좋은 곳이다. 중문천 건너편으로 천혜 연륙포가 있고 색달해변쪽으로는 신라·롯데·하얏트 등 제주 3대 호텔이 자리잡고 있다. 삼풍그룹이 이곳에 1989년 동양 최대의 유리온실 식물원을 지은 이유를 알 만하다.

여미지식물원은 개원 당시 전국적인 관광지로 이름을 날렸다.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들러야 할 곳으로 입소문을 타고 세계 각국의 희귀식물을 한자

풍고 사고에 따른 유족 보상비 부담 조건으로 서울시가 삼풍개발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수차례 매각시도가 있었고 결국 2005년 광주 기업인 부국철강이 계열사를 통해 553억 원에 사들였다. 당시 지역사회에선 부국철강의 투자가 화제가 됐다. 업종이 전혀 다른 데다 투자 규모도 컸기 때문이다.

부국철강은 인수 후 변신을 시도했다. 계절별 사진전을 열고 빈 소년합창단 공연을 열었다. 별종 유기 식물을 자체 배양해 해마다 자생지 복원 사업을 하는 식물원 본연의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여미지식물원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 여미지식물원 노조원들이 부국철강 본사에 찾아가 남상규 회장의 노조 탄압과 과도한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원들은 광주에선 ‘기부천사’로 알려진 남 회장이 제주에선 작위 기업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회장은 “연간 100만 명씩 찾던 관광객이 40만 명으로 줄어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은 밝혀져왔지만 광주 기업인의 이미지 실추가 이슈가 되고 있으니 안타깝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